



김해시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에 방 주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김해시

###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 김해, 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경상남도 김해시가 2025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보호 의지를 강조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김해시가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과 '아동학대예방 주간(11월17-23일)'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해 1부 기념식과 2부 '마음자람 스토리 콘서트'로 구성했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 △기념 영상 상영 △아동학대 없는 세상 공동실천 선언문 낭독 △피로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마음자람 스토리 콘서트는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김선영 소장(나남아동가족심리연구소)이 스토리텔러, 부산-경남 재즈뮤지션들로 구성된 씨니 밴드가 연주자로 참여해 치유적 음악을 선보였다.

김해시는 아동학대예방 주간인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예방 헬렌지 △아동권리놀이터 in 김해 △아동권리존 중 놀이키트 지원 △위 메이드'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 체험활동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관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지연 기자newsdaily1@naver.com

### 부산교육청, 인권교육 활성화 제4·3평화재단과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이 18일 제4·3평화재단과 '역사·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교원 연수, 교육자료 공동 개발, 학생 참여형 교육 활동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은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원 연수 및 학생 참여형 교육 활동 지원, 역사·평화·인권교육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토론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기관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역사·평화·인권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평화·인권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제4·3평화재단과 함께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4·3평화재단 이사장은 “부산교육청과의 협력은 43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기회이다”라며 “두 기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종창 기자jckim@skyedaily.com

# 경남 '도민연금' 협력 선언... 내년 시행 준비 속도

## 공적연금 수령전 공백기 지원 전국 첫 시책 지자체·금융권 공동체계 구축 역할 분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의 지역형 연금제도인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과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기관들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 추진에 나선다.

도는 “시행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 구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안수 지사는 협약식에서 “조기 퇴직 증가로 공적연금 수령 전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먼저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와 타 시도도 유사 제도를 검토 중이다”라며 제도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공적연금 수령 전 공백기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55세 경남도민이며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연 24만 원을 10년



경상남도가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박안수 지사가 19일 협약식에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간 지급한다.

도는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10만 명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마련, 자금 조성 등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약식은 정책 브리핑과 응원 영상, 미니 토크콘서트 등 참여형 행사로 구성돼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남중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배

경과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고 백해연 국립장원대 교수는 초기 정착 전략을 제시했다.

도민 대표 임경아 줄마텔라 매니저는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연금 필요성과 가입 의향 모두 높은 응답이 나왔다”며 “간단한 절차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연금은 '경남에 살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현장의 기대감을 전했다.

행사 말미에는 창원-밀양-양산-함안-창녕-함양 지자체장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제도 추진에 지역 차원의 지지를 보였다.

한편 경남도는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9월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박지연 기자newsdaily1@naver.com

## 부산시, 아시아 최초 세계항구도시협회 이사회 진출 쾌거

### 미국 뉴욕 총회서 만장일치로 임원도시 당선 국제 해운·항만 이니셔티브 주도 영향력 확보



18일 미국 뉴욕에서 2025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가 열렸다. 부산시

부산광역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에서 이사회 임원도시로 만장일치 당선돼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역량을 알렸다.

1988년 설립된 세계항구도시협회(AIVP)는 지방정부·항만운영기관·전문가 등 44개국 197개 회원을 보유한 국제 협회로 항구도시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5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으며 부산시 대표단은 이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의 역량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진출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서 위상을 높였

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 항구도시들과 함께 세계 해운·항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사회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주요 역할은 집행위원회 구성, 총회 개최도시 선정, 공동 의제·프로젝트 등 협회 핵심안건 제안 및 심의, 연간 예산심의 및 재무제표 승인 등이 있다.

회원기관 중 아시아 최초로 세계항구도시협회 이사회에 진출하면서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 중심의 글로벌 항구도시 거버넌스에 아시아 도시로서는 처음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번 쾌거가 '국제물류협회 총회' '아워오션컨퍼런스' 등 저명 국제행사 유치로 통해 높아진 도시브랜드와 올해 8월

박 시장이 선포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과 전략' 등 부산의 세계적 해양도시 역량이 협회 사무국과 회원기관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남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 진출로 향후 총회 개최지 결정에 대한 표결권과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유하게 돼 '2027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따라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쾌거는 부산의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과 전략이 국제 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상징적인 사례다”면서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이사회 임원 활동을 하게 된 만큼 유럽, 미국, 아프리카 중심의 세계항구도시 교류망에 아시아 항구도시의 진출을 이끄는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종창 기자jckim@skyedaily.com

##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인식개선 앞장

### 교육 실시... 대응전략 공유 사회 안전망 협력 강화 기대

경상남도 양산시가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편견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일 양산시에 따르면 19일 시청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고립·은둔 청년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에는 약 70명이 참석해 관련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교육은 고립·은둔을 경험한 안현수 청

년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시작했다. 이어 최진오 국립장원대 교수가 '고립·은둔 청년의 이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현장 대응 전략과 조기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편견 해소 △공무원·이동장·주민 등 지역 구성원의 사회적 감수성 향상 △발굴 및 신고·연계 의지 강화 △청년 사회 안전망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석한 한 시민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

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과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며 “읍면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다양한 지원 정책과 연계 활동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박지연 기자newsdaily1@naver.com

## 창원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모색

### 기본계획 전문가 자문회 개최 지역특성 반영 정비 필요 제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1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체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창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 내용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앞둔 창원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주거 과밀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되고 2024년 4월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창원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창원시 배후도시가 주거·상업·공업·업무 지구가 광역적으로 혼재돼 있다는 점과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정비기법을 활용해 창원시 특성에 맞는 광역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창원시에 적합한 노후계획도



창원시가 19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위해 자문회의를 가졌다. 창원시

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합리적 논의의 장이었다”며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박지연 기자newsdaily1@naver.com



기장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기장군

## 기장군 “김장 준비 부담 줄이세요” 온누리상품권 환급... 국내 수산물 구매 최대 2만원

부산광역시 기장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일 기장군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23일까지 기장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멀치, 새우젓, 굴 등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기장시장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5개 점포

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앞에 별도 표시가 돼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입 후 상인이 간편한 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전달하고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종복 군수는 “올해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환급 행사인 만큼 많은 분이 참여해서 기장시장의 청정 수산물을 구매하고 김장 준비 부담도 줄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김종창 기자jckim@skyedaily.com